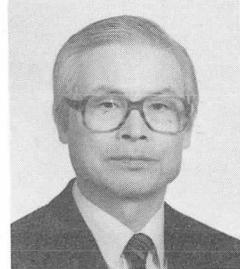




14대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



주종환교수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교착상태에서 헤메이고 있으나, 우리의 축산업은 그것과는 별도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수입자유화계획에 의해 여전히 심한 몸살을 앓아 왔고 또 지금도 앓고 있다.

한 때에는 양돈업의 장래에도 심한 먹구름이 끼인 것 같아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각계 각종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돈업은 그런대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가 더 일충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까운 일본을 상대로 한 유망한 수출산업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장래상까지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한때 90kg 성돈 한 마리에 10만원대 아래로 까지 폭락하였던 돼지 가격도 최근에는 14~15만원대로 회복세를 나타내어 양축농가들은 약간 안도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양돈업의 앞날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14대 국회는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표류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양돈산업은 물론 그 밖의 국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응분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수많은 현안들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양돈업의 입장에서 14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급한 것은 무허가 양돈장의 양성화 문제이다.

무허가 양돈장이 널려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양돈산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무허가 상태에서는 지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 쪽에서는 양돈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양돈을 못하게 하는 모순이 빚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양돈장은 과감히 양성화시켜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은 역시 민생의 안정과 성장에 있는 만큼, 무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국회가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로, 양돈산업과 관련하여 국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정부 및 농민과 이마를 맞대어 생각해 내는 일이다.

지금 양돈을 포함한 모든 축산업은 축산분뇨문제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기준법의 적용은 축산업자들의 진정으로 금년 말까지 일단 연기되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대폭 강화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국회는 그동안의 정부의 대책을 점검해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채찍질을 해야 한다.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효과면에서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자본력이 풍부한 대규모 양돈업자의 경우에는 풍부한 자본력으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간이정화조의 설치로서 얼버무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간이정화조의 설치에 대해 보조와 융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도民間의 노력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모양인데, 일시방편에 불과한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기동성있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행정은 원래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기술의 혁신은 역시 창조적인 기업가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표준적인 몇 개의 시설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것에 한하여 보조와 융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경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된다. 창조적인 양돈업자가 개발해 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언제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의 문을 활짝 열어 놓도록, 국회는 언제나 감시와 채찍질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환경조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일도 이번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다. 양돈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판정이 나 있음에도 돼지고기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육기술을 개선하고, 도축시설과 냉장시설을 현대화 하면, 돼지고기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쟁국인 대만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을 직시해야만 한다.

앞으로의 국회는 국무위원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민생의 실정을 세밀히 조사하여 국무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문제를 구체적으로 효과있게 해결해 주는 국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